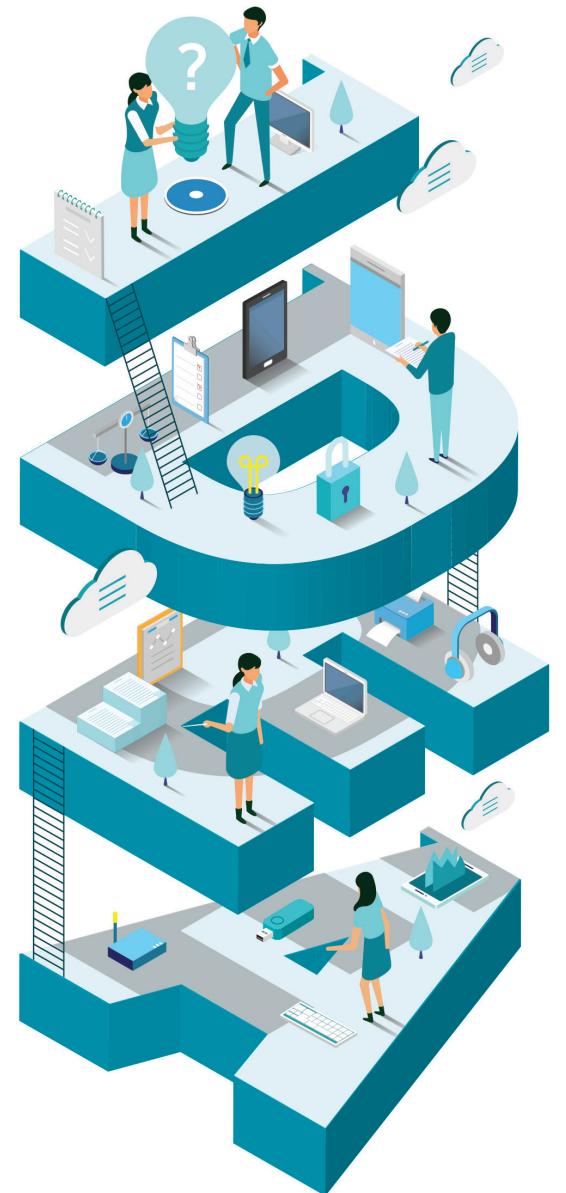




2019 특허청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집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2019. 11.



2019 특허청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집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규제개혁부담당관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http://www.kipo.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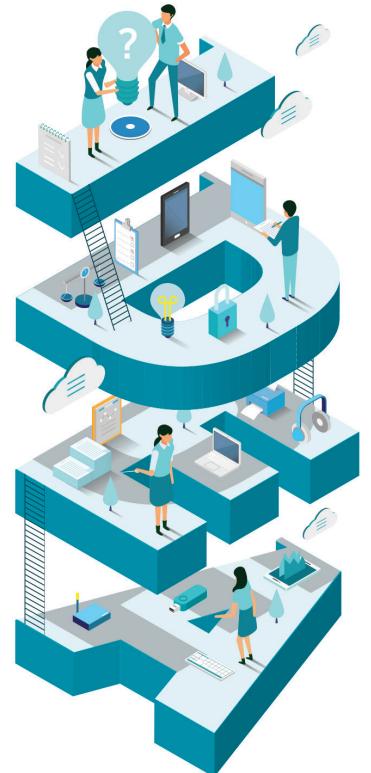




2019 특허청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집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2019. 11.



2019 특허청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집

CONTENTS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www.kipo.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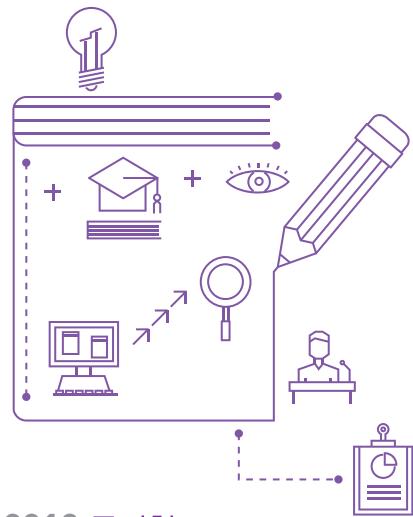
국민·현장중심의 2019 특허청 규제혁신 우수사례

- | | | |
|--|---|----|
| | 01
4차 산업혁명 기술 관련 新특허분류체계 및 우선심사 확대
<small>특허심사기획과</small> | 6 |
| | 02
디자인 출원 관련 서류 제출 간소화
<small>디자인심사정책과</small> | 8 |
| | 03
초기 중견기업에 대한 지식재산 가치평가 지원
<small>산업재산활용과</small> | 10 |
| | 04
중소기업 등의 특허기술 신탁시 특허 연차 등록료 감면제도 도입
<small>정보고객정책과</small> | 12 |
| | 05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특허심판 국선 대리인 제도 도입
<small>심판정책과</small> | 14 |
| | 06
공인인증서 외의 인증서비스 제공
<small>정보시스템과</small> | 16 |
| | 07
특허 수수료 직권감면 확대 및 서류 제출 부담 완화
<small>정보고객정책과</small> | 18 |

국민·현장중심의 2019 특허청 적극행정 우수사례

- | | | |
|--|---|----|
| | 01
중소·중견기업의 특허분쟁 고민해결
<small>산업재산정책과</small> | 22 |
| | 02
사장님! 이제 특허기술로 대출 받으세요
<small>산업재산활용과</small> | 24 |
| | 03
중소기업 특허수수료! 감면신청 안해도, 증명서류 없어도 감면해줘요
<small>출원과</small> | 26 |

국민·현장중심의 2019 특허청 규제혁신 우수사례



2019 특허청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집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 01_ 특허심사기획과
4차 산업혁명 기술 관련 新특허분류체계 및 우선심사 확대
- 02_ 디자인심사정책과
디자인 출원 관련 서류 제출 간소화
- 03_ 산업체산활용과
초기 중견기업에 대한 지식재산 가치평가 지원
- 04_ 정보고객정책과
중소기업 등의 특허기술 신탁시 특허 연차 등록료 감면제도 도입
- 05_ 심판정책과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특허심판 국선 대리인 제도 도입
- 06_ 정보시스템과
공인인증서 외의 인증서비스 제공
- 07_ 정보고객정책과
특허 수수료 직권감면 확대 및 서류 제출 부담 완화



01

4차 산업혁명 기술 관련 新특허분류체계 및 우선심사 확대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과 (042-481-3580)

Q

정부가 추진 중인 13대 혁신성장동력분야 중
상업용 드론을 개발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최근 4차 산업혁명 기술분야에 대하여
우선심사 신청을 통해
빠른 권리 획득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드론 기술도 우선심사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특허청은 2018년 4월부터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
기술과 관련된 7개 분야의 특허 출원에 대하여
우선심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 2019년 6월부터는 13대 혁신성장동력분야
모두를 포괄할 수 있도록 우선심사 대상을
16개 기술 분야로 확대하였으며, 이에 따라
드론 기술에 대해서도 우선심사 신청을 통한
조기 권리 확보가 가능합니다.



과제 개요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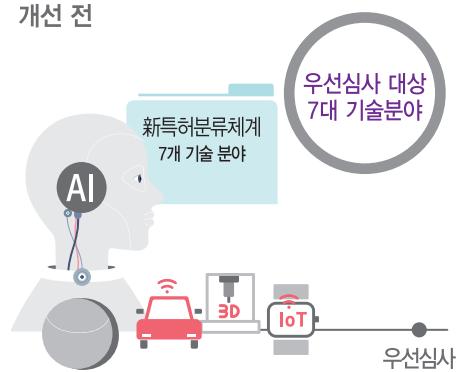
4차 산업혁명 기술 관련 新특허분류체계 및 우선심사의 기술분야가 7대 기술분야에 한정

관련규정

특허법 시행령 제9조, 특허 · 실용신안 우선심사신청 고시 제4조

개선 내용

개선 전



- 4차 산업혁명 관련 7개 기술 분야 특허 출원에 대해서만 우선심사 허용

* (기존) 인공지능(AI), 사물 인터넷(IoT), 3D 프린팅,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및 지능형로봇

개선 후



- 4차 산업혁명 관련 9개 기술 분야*를 新특허분류체계에 추가하고, 우선심사 대상을 16개 분야로 확대

* (추가) 스마트시티, 가상증강현실(VR/AR), 혁신신약, 신재생에너지, 맞춤형 헬스케어, 드론, 차세대통신, 지능형 반도체, 첨단소재

기대 효과

- 4차 산업혁명 관련 신기술에 대한 우선심사를 확대해, 우리 기업의 혁신성장 동력분야 시장 내 지식재산권 선점*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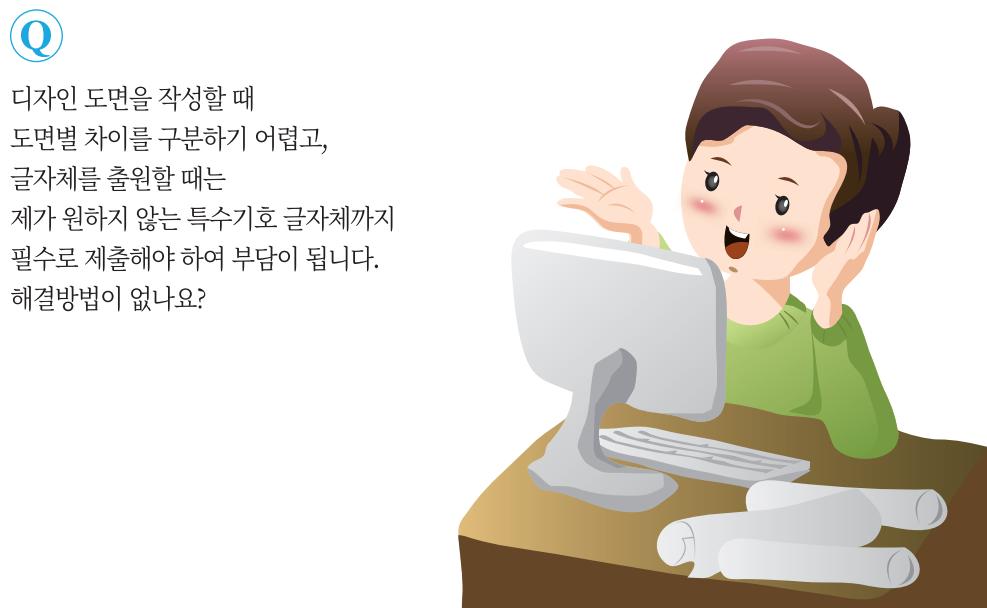
* 특허 1건당 약 11개월(전체평균 16.4개월 → 우선심사 5.7개월)이 단축되는 효과

- 4차 산업혁명 관련 신기술에 대한 관리 체계 구축 및 산업정책 · 과학기술정책 수립에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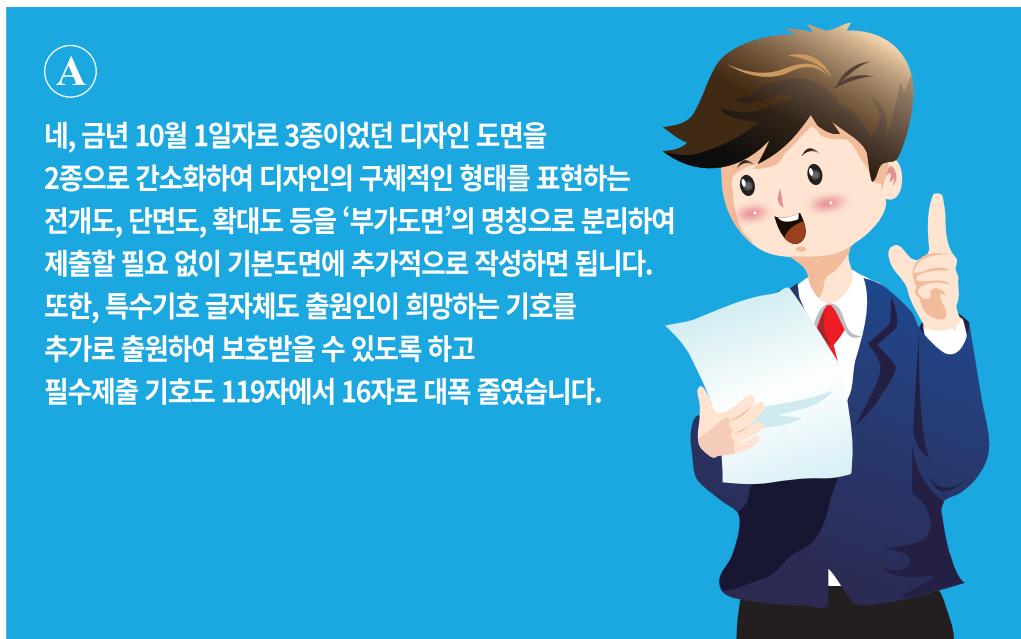
상업용 드론을 개발하고 있는 A사는 국내 및 해외 바이어와 상담 중이며, 마케팅 및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특허를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2018년의 경우, 4차 산업혁명 기술 관련 우선심사 대상에 드론이 포함되지 않아 특허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약 11개월이 소요되는 일반심사 결과를 기다려야 했다. 그러나 2019년 6월부터 특허청에서 우선심사 신청이 가능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분야를 7개에서 16개로 확대함에 따라 13대 혁신성장동력분야에 해당하는 드론 기술이 포함되었고, A사는 우선심사 신청을 통해 약 6개월 내에 특허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조기에 특허권을 확보하게 되면 A사의 사업 확장 및 투자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02 디자인 출원 관련 서류 제출 간소화

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 (042-481-5766)



네, 금년 10월 1일자로 3종이었던 디자인 도면을
2종으로 간소화하여 디자인의 구체적인 형태를 표현하
전개도, 단면도, 확대도 등을 ‘부가도면’의 명칭으로 분
제출할 필요 없이 기본도면에 추가적으로 작성하면 됩니
또한, 특수기호 글자체도 출원인이 희망하는 기호를
추가로 출원하여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필수제출 기호도 119자에서 16자로 대폭 줄였습니다



과제 개요

문제점

부가도면과 참고도면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워 도면 종류의 혼란과
도면별 판단기준의 차이가 있어 잦은 거절의견통지로 출원인의 불편 기중
특수 글자체 도면 요건이 거래수준보다 과도하여 출원인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지정글자 외의 특수기호 보호에도 제약이 존재

관련규정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별표1

개선 내용

개선 전

기본도면,
부가도면 및
참고도면으로
구분 · 제출



- 디자인 도면은 기본도면, 부가도면 및 참고 도면으로 구분 · 제출
- 특수기호 글자체 119자를 모두 도시하여 출원하도록 규정

개선 후

기본도면, 참고도면으로 간소화



- 부가도면을 기본도면에 통합시켜 기본도면과 참고 도면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도면의 종류 간소화
- 특수기호 글자체의 필수 글자개수를 16개로 완화하고 원하는 경우 추가 지정 가능

기대 효과

- 도면의 간소화와 특수기호 필수글자체 개수 감소로 출원인의 서류제출 부담이 완화되고, 도면통합으로 신속한 심사처리*가 가능해져 출원인의 권리 보호 강화

대리인(변리사) 없이 디자인을 출원하는 A(60)는 디자인 도면에서 물품의 단면을 표현한 도면을 기본도면에 포함시켜 출원하였는데, 심사관으로부터 단면도는 디자인의 구체적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도면으로 부가도면에 해당하므로 기본도면에서 분리하여 부가도면으로 고ぶ하라는 의견서를 받았다.

또한 출원인 B(55)는 본인이 개발한 특수기호 글자체를 등록하고 싶었으나, 지정된 글자(119자)외에는 등록이 불가능하여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어쩔 수 없이 지정된 글자체에 포함된 특수기호 일부만 이라도 등록받고 싶었으나, B가 원하는 글자체 이외에도 119자 전체를 도면에 표현해야만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특허청에서는 디자인의 구체적 상태를 표현하는 부가도면을 기본도면에 포함하도록 하여 도면작성의 혼란을 줄였고, 특수기호 글자체도 출원인이 희망하는 글자체 모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면서 폰스글자체 개수도 대폭 간소해 출원인이 편의를 증대했다.

03 초기 중견기업에 대한 지식재산 가치평가 지원

특허청 산업재산활용과 (042-481-5807)

Q

최근 중견기업이 된 1년차 기업입니다.
보유한 특허의 가치평가를 기반으로
사업자금을 조달하거나, 사업타당성 분석 등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중견기업에도 가치평가 비용 지원이
가능한가요?
어떤 기관에 평가를 신청하면 되나요?



A

2019년 5월부터 초기 중견기업에 해당하면 가치평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견기업으로 진입하고
3년 이내 기업으로서 직전년도 매출액이 3,000억원
미만일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가치평가는 특허청이 지정하는 발명의 평가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평가기관 정보는 특허청(042-481-5807)
또는 발명진흥회(www.kipa.org, 02-3459-2938)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제54조의2 제2항 제3호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 이내의 기업
(단, 직전연도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 기업은 제외한다)

과제 개요

문제점

초기 중견기업도 자금조달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어, IP가치평가연계
금융을 통한 애로사항 극복 지원 필요

* 특허기술 사업화 추진시 중소기업 33.8%, 중견기업 25%가 자금 부족으로 인해 사업화가 어렵다고
답변('17,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관련규정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제54조의2

개선 내용

개선 전



- 개인 또는 중소기업에 한정하여 지식재산 가치평가를 지원

개선 후



- 개인,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초기 중견기업까지 가치평가 지원 대상에 포함

기대 효과

- 초기 중견기업도 IP 가치평가를 활용하여 원활하게 사업화 자금을 마련해 혁신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 마련

중견기업 진입 1년차인 A사는 특허를 적용한 제품의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공장설비 증축이 필요하였다. 중소기업이었을 때와 달리, 중견기업이 되자 지식재산 가치평가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을 듣고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대출을 알아보아야만 했다. 그러나 특허청에서 초기 중견기업까지 비용지원 대상을 확대하면서 A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고, 고금리의 은행대출을 받을 필요 없이 IP 가치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A사는 사업타당성 확보, 해외바이어 마케팅, 금융권 자금 조달 등이 가능할 예정이다.

04 중소기업 등의 특허기술 신탁시 특허 연차 등록료 감면제도 도입

특허청 정보고객정책과 (042-481-5716)

Q

저희는 중소기업 등의 미활용 특허를 대신 관리하여 사업화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신탁 관리 기관입니다.
특허권의 처분은 위탁자인 중소기업이 결정하고, 저희는 중소기업의 특허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데도 중소기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등록료 감면을 받지 못합니다.
등록료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A

2019년 7월부터 위탁자가
중소기업인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을
기술신탁 관리기관이 수탁하여
등록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과 동일한 연차등록료 감면(50%)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제 개요

문제점

중소기업의 특허를 수탁 받아 기술이전·사업화 또는 기술분쟁 대응 등을 지원하는 기술신탁관리기관은 특허권 등의 연차등록료 감면 대상에서 제외

관련규정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

개선 내용

개선 전



- 중소기업의 특허를 수탁 받은 기술신탁관리 기관에 대한 연차등록료 감면 혜택 없음

개선 후



- 중소기업의 특허를 수탁 받은 기술신탁관리기관에 대한 연차등록료 50%감면 혜택 신설

기대 효과

- 기술신탁관리기관의 특허권 등에 대한 연차등록료 부담 완화
- 중소기업 특허를 수탁 받는 기술신탁관리기관의 비용을 줄여 기술이전·사업화, 기술분쟁 대응 등의 지원을 확대해 중소기업 특허기술의 활용 및 보호 촉진

중소기업으로부터 수탁 받은 특허권에 대해 기술이전·기술 분쟁 대응 등의 지원 사업을 하는 A기관은 해당 특허의 등록료 납부도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A기관은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실제로는 중소기업이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감면을 받지 못하고 더 많은 수수료를 납부해야 했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위탁자가 중소기업인 특허권을 기술신탁 관리기관이 수탁하여 등록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과 동일한 감면을 받게 되어 상당한 비용을 절감하게 되었다.

05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특허심판 국선 대리인 제도 도입

특허청 심판정책과 (042-481-5583)

Q

전기장비를 제조하는 벤처기업을 몇 년 전에 창업했고
이제 매출이 올라가기 시작하니
경쟁업체가 자신의 특허와 동일하다고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응하고자 특허 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데,
대리인 선임 비용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혹시 지원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A

2019년 7월 9일부터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제도’가
시행되어,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소기업,
청년창업자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개인 혹은 중소기업이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면 국선대리인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로(www.patent.go.kr) 홈페이지에서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에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와
함께 제출하시면, 신속한 심사를 통해
무료로 국선대리인을 선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과제 개요

문제점

중소기업, 의료급여 수급자 등 사회·경제적 약자는 많은 비용이 드는
지식재산 분쟁에 대응하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

* 최근 5년('14-'18년)간 사회·경제적 약자의 대리인 없는 심판사건 수: 연평균 388건

관련규정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

개선 내용

개선 전



- 사회·경제적 약자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지원이 취약

개선 후



-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국선대리인 선임 지원
 - (지원대상) 소기업, 대기업과 분쟁 종인 중기업, 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 청년 창업자 등 사회·경제적 약자
 - (수수료 감면) 국선대리인을 선임한 당사자의 심판청구료 전액 감면 지원

기대 효과

- 사회·경제적 약자의 분쟁 대응 비용 부담 경감 및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심판의 피청구인인 주식회사 A는 소기업이며 국선대리인 제도 시행일인 2019.7.9. 이전부터 제도 시행일 및 국선대리인 선임 가능 여부에 대해 수차례 문의하였다. 이후, 국선대리인 제도의 시행일이 피청구인인 A사의 국선대리인 신청 가능시기인 답변서 제출 기일의 만료일 이후였으나, 피청구인의 사정을 감안하여 답변서 제출 기일 연장을 3회 허용해주었고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A사는 특허 대리인 선임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대리인 선임을 포기하려 했으나, 국선 대리인 선임을 지원받게 되어 특허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

06 공인인증서 외의 인증서비스 제공

특허청 정보시스템과 (042-481-5159)

Q

특허로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특허행정 정보를 확인하려면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하는데
공인인증서 발급절차도 까다롭고
관리하기에도 불편함이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편하게
로그인할 수는 없을까요?



A

2020년 1월부터 새로운 특허로 홈페이지
(www.patent.go.kr)에서는 공인인증서 외에도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전자정부 공통 본인확인
서비스인 ‘디지털원패스’ 서비스를 이용하여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원패스’ 서비스에 본인확인 수단으로
이메일, SMS, 생체인식 등 다양한 방법을
등록한 후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과제 개요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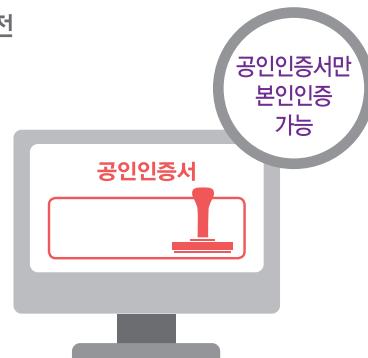
전자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로만 로그인이 가능하며, 이로 인해
별도의 필수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매년 만료되는 공인인증서를 갱신·등
록해야 하는 불편 발생

관련조치

전자출원 시스템 개선

개선 내용

개선 전



- 전자출원 서비스 이용 시 공인인증서만을
이용하여 본인인증이 가능

개선 후



- 행안부의 ‘디지털원패스’ 서비스를 도입하여 공인
인증서 외에도 지문인식, 이메일, 패스워드 등
다양한 본인인증 방법 제공

기대 효과

- 다양한 본인인증 방법 제공으로 출원인 선택권 보장 및 편의성 제고
 - PC외의 기기로도 로그인이 가능하므로 향후 모바일 서비스 제공(‘20년 이후) 시 편의성 극대화

특허를 출원한 A씨는 자기가 출원한 특허가 처리 중인지 궁금하여 특허로에 접속하여 확인하고 싶었으나,
공인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갱신후 재등록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편을 겪었다. 그러나
2020년부터 행안부의 디지털원패스가 특허로 홈페이지에도 도입이 된다면, SMS인증으로도 로그인이
가능해져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처리 중인 출원건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07 특허 수수료 직권감면 확대 및 서류 제출 부담 완화

특허청 정보고객정책과 (042-481-5716)

Q

작게 사업을 시작했지만 중견기업까지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이었을 때는 특허 출원을 할 때에 한 번만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수수료 감면을 받을 수 있었는데, 중견기업이 되니 매번 증명서류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사업이 성장한 것은 기쁘지만 매번 증명서류를 제출하려니 불편한데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A

2019년 3월부터는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한 번만 중견기업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유효기간 내의 출원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감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수료 사후 감면 신청을 할 때에도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했던 통장사본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과제 개요

문제점

중견기업 등 개인 및 중소기업 이외의 수수료 감면 대상자는 매번 감면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 제출 필요

수수료 사후 감면 신청 시, 통장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감면 신청서가 반려되어 다시 신청해야 하는 부담 존재

관련규정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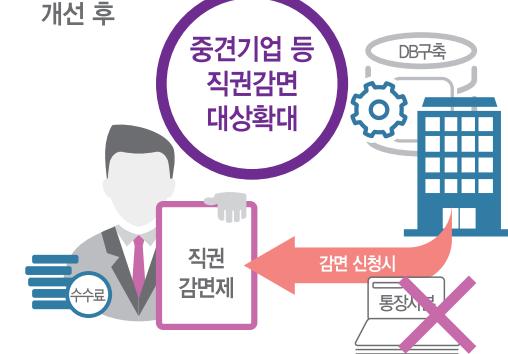
개선 내용

개선 전



- 개인 및 중소기업 출원인만 직권감면제 시행
- 수수료 사후 감면 신청 시 통장사본 제출 필수

개선 후



- 중견기업 등의 수수료 납부건에 대한 방식심사시 감면대상자 DB구축을 확대하여 직권감면제 시행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수수료 사후 감면 신청시 통장사본 제출 생략

기대 효과

- 행정절차 간소화로 신속한 권리 확보 지원 및 서류 제출 생략으로 국민 편의 제고

기존에는 수수료 사후감면을 신청할 때 통장 사본을 첨부하지 않으면 신청이 반려되어 처음부터 신청 절차를 다시 시작해야 했고, 담당자는 반려까지 한 달 동안 해당 신청서를 보류해야 했다. 그러나 제도개선을 통해 신청인이 금융정보 확인을 동의하는 경우에는 통장 사본을 첨부하지 않고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신청인은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부담을 덜었고, 특허청은 반려통지서 발송 비용 등의 행정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국민·현장중심의 2019
특허청 적극행정
우수사례



2019 특허청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집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01_ 산업재산정책과
중소·중견기업의 특허분쟁 고민해결

02_ 산업재산활용과
사장님! 이제 특허기술로 대출 받으세요

03_ 출원과
중소기업 특허수수료! 감면신청 안해도, 증명서류 없어도 감면해줘요



01

중소·중견기업의 특허분쟁 고민 해결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 (042-481-8180)

Q

미국에 국내 특허를 이용한 차량용 스마트 기기 거치 어셈블리 상품을 해외시장에 판매하고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동종업계의 경쟁사인 미국의 J社와 K社는 자석을 이용한 스마트폰 거치대 관련 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있어 우리회사가 미국 수출시 발생 가능한 특허분쟁에 따른 소송 비용이 걱정됩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이 없을까요?



A

2019년 8월 29일부터 '특허공제' 상품이 출시되었습니다.
특허공제는 30~1,000만원 상품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은행적금과 같이 매월 납부하여 적립하고 1년 이후부터 국내외 특허분쟁 발생 시 적립된 금액의 5배 이내에서 지식재산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특허공제(<https://ipmas.or.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특허공제 대표전화(☎1544-112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과제 개요

문제점

특허분쟁 발생 시 소송비용 및 손해배상금 등으로 자금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에 막대한 경영차질 초래

관련규정

발명진흥법 제50조의4, 5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3, 4, 5

해결 노력

- 특허공제 시행을 위한 발명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 실효성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허공제 상품 재설계

개선 내용



- 특허분쟁으로 추가자금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기업이 담보대출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자금마련 · 특허분쟁 대응

- 공제상품 가입 시 1년 후부터 대출 가능
 - 부금 이자를 2.0%, 대출금리 2.0%
 - 지식재산 대출 가능 최고액 25억원 (납입부금 5억원 적립 시)

주요 성과

- 특허공제 상품 출시('19.8.29) 이후 50 영업일('19.11.12) 만에 1,038개의 중소기업이 가입 신청

중소기업 A社는 최근 개발한 차세대 의료기기가 호평을 받으며 해외 각국에 계약을 진행하던 중, 유사제품을 판매하는 경쟁사 B社로부터 특허침해소송을 제소받았다. 이에 소송대응 방안을 마련하면서 기업의 유보금보다 많은 자금이 필요한 것을 알게 되어, 지금 마련 방안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다행히 광고를 보고 가입했던 특허공제 상품을 통해 1년 후부터는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자금융통에 한숨을 덜게 되었다.

02

사장님! 이제 특허기술로 대출 받으세요

특허청 산업재산활용과 (042-481-5174)

Q

공장 증축자금이 필요한데,
공장 건물이 이미 담보로 잡혀 있고
추가 담보여력도 없어
자금을 구할 길이 막막합니다.
보유한 특허기술을 담보로
활용하여 사업화 자금을
대출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A

올해부터 하나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등
5개 은행이 특허담보대출 상품을
신규로 출시하였습니다.
부동산과 같은 담보가 없고 신용도가
낮은 기업도 보유한 특허기술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를 담보로 제공할 경우,
대출한도가 증액되고 금리가 인하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과제 개요

문제점

국내 시중은행은 가치를 평가하기가 어렵고, 부실이 발생했을 때 자금 회수 가능성이 낮은 특허담보대출을 기피

관련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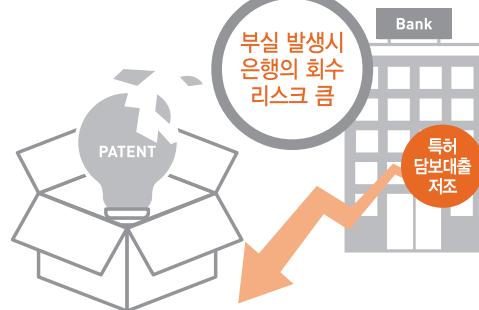
발명진흥법 제32조의2, 제32조의3

해결 노력

- 은행의 회수 리스크를 경감하기 위한 신규사업(담보 산업재산권 매입)을 추진하기 위해 근거법률인 「발명진흥법」 개정('19.4월)
- 민간은행의 특허담보대출 상품 출시를 위해 특허청·금융위·민간은행의 업무협약 체결('19.4월)

개선 내용

개선 전



개선 후



- 특허담보대출 이후, 부실 발생시 담보물인 특허 매각이 어려워 은행의 회수 리스크가 큼
- 민간은행의 특허담보대출 저조

- 부실 발생시 정부·은행의 출연금으로 담보물인 특허를 매입함으로써 은행의 회수 리스크를 경감
- 민간은행의 특허담보대출 확대

주요 성과

- 기존 국책은행 위주에서 '19년 5대 민간은행이 특허담보대출 상품 신규 출시
 - * '18년 산업·기업은행 → '19년 하나·신한·국민·우리·농협
- '19년 305개 기업에 약 2,000억원의 특허담보대출 실행(예상)
 - * 대출실적: ('18) 63개 기업, 884억원 → ('19.9월) 260개 기업, 1726억원

스타트업 R社(TV셋톱박스 제조)는 수출용 원자재 구입을 위해 자금이 필요하였지만, 기존 대출이 있는데다 부동산 등 추가 담보여력도 없어 사업화 자금 마련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다행히 R社는 올해 S은행의 '특허담보대출' 상품을 알게 되었고 특허를 담보하여 일반대출 보다 낮은 금리로 15억원을 대출 받는데 성공하였다.

03

중소기업 특허수수료! 감면신청 안해도, 증명서류 없어도 감면해줘요

특허청 출원과 (042-481-3548)

Q

저는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최근 발명한 oo기계를
특허 출원하려고 합니다.
중소기업이면 출원할 때
특허수수료를 감면해준다고 들었습니다.
수수료를 감면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현재 중소기업에 대하여 출원료, 등록료 등
수수료의 약70%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2019년 10월부터 중소기업 정보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특허청이 제공받게 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중소기업이면 누구나 감면신청이나 증명서류 제출 없이도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 감면율(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

감면율	감면대상 수수료	요건
70% 감면	• 출원료 • 최초 3년 분의 특허(등록)료 • 권리법위확인심판 청구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50% 감면	• 4년 분부터 존속기간까지의 특허(등록)료	

과제 개요

문제점

중소기업이 수수료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특히 출원료, 등록료 등을 납부할 때마다 감면신청을 해야 하고, 중소벤처기업부 등에서 발급하는 중소기업 증명서류를 특허청에 제출해야하는 불편 상존

관련규정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증명서류의 제출생략에 관한 고시

해결 노력

- 중소벤처기업부와의 적극적 협업 추진으로 중소기업정보를 제공받아, 특허청에 기업정보 확인시스템을 구축하여 특허청이 중소기업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 감면혜택 제공

개선 내용

개선 전



개선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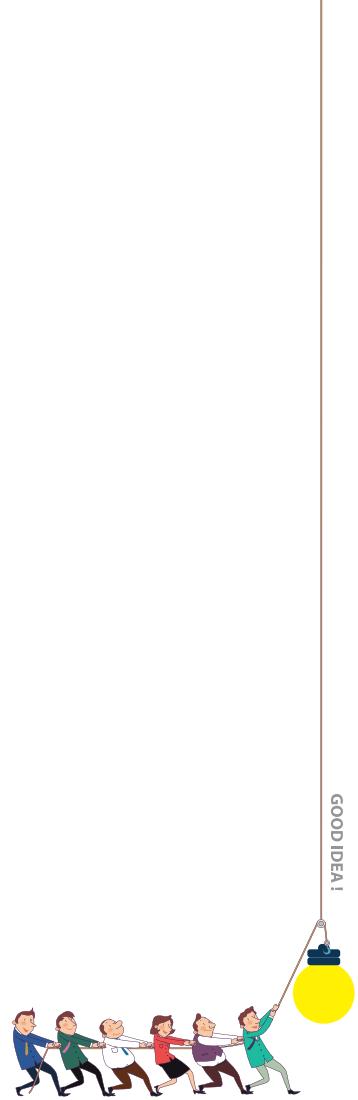
- 수수료를 납부하는 모든 단계에서 감면신청하고 중소기업 증명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만 특허수수료 감면혜택 제공

- 중소기업이면 특허청이 알아서 감면혜택 제공
 - 출원 등 모든 단계에서 감면신청 NO!
증명서류 발급 NO! 증명서류 제출 NO!

주요 성과

- 중소기업이면 누구나 감면신청 및 증명서류 없이도 수수료가 감면되어 제도를 몰라 혜택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의 경제적 손실 방지
- 서류 제출 생략에 따른 중소기업의 시간·비용 절감 및 서류 검토·확인에 소요되는 행정력을 줄여 신속한 특허권 확보 지원

중소기업 A는 2019년 10월 특허를 출원하면서 감면제도를 알지 못해 특히 출원료 전액을 납부하였다. 그런데 특허청으로부터 특허출원료를 반환받으라는 안내서를 받게 되었고 출원료 70%를 돌려받게 되었다. 중소기업 A는 앞으로 해당 출원에 대한 심사청구를 할 때, 특허를 등록할 때, 새로운 출원을 할 때 등 특허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계속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을 것이다.



2019 특허청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집

발행일 2019년 11월

발행처  특허청

발행인 특허청장 박 원 주

기획 규제개혁법무담당관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http://www.kipo.go.kr>

*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특허청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